

놀이기구 썩어있고 나사 빠져 덜렁...어린이 안전 위협

광주 어린이공원 둘러보니

광주지역 어린이공원의 놀이기구 등이 부식되거나 파손된 채 방치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광주시가 '아이남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했으나 정작 5개 자치구는 의지와 예산부족으로 어린이공원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26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시 서구 치평동 원마루어린이공원은 총체적 관리 부실 상태였다.

바닥재(탄성 포장재)는 갈라졌고 조합놀이대(미끄럼틀 등 여러 기구가 조합된 놀이시설)는 부식과 파손이 심각했다.

조합놀이대 경사면에 설치한 나무 발판은 못이 빠져 덜렁거리고, 미끄럼틀은 고정이 안 돼 2cm가량 벌어진 틈새에 글루건을 군데군데 발라놓았다.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목적은 쪼개지거나 거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또한 썩거나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관리자인 광주시 서구청은 이 어린이공원 놀이기구에 지난 7월 14일자로 발급된 '정기시설검사 합격증'을 버젓이 붙여놓아 '시설 검사' 여부를 의심케 했다. 각 자치구는 2년에 한 번씩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게시해야 한다.

곳곳 파손되고 틈새 벌어져 불안 간간·흔들다리 쇠줄로 대충 고정 부러진 기둥 방치, 관리 부실한데 '정기시설검사 합격증'은 버젓이 자치구들 '예산 부족에 보수 한계'

다른 어린이공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서구 치평동 장수어린이공원의 조합놀이대는 흔들다리의 연결부 고정용 브래킷(bracket)이 사라져 간간과 흔들다리를 쇠줄로 대충 묶어놓았다.

시소는 충격 흡수용 타이어가 찢어져 주저앉아 있었다. 이곳에는 지난 7월 16일자로 검사 유효기간이 4개월이나 지난 정기시설검사 합격증이 붙어 있었다.

서구 치평동 해오리 어린이공원 시설에도 지난해 7월 3일 유효기간 만료된 정기시설검사 합격증이 붙어 있었다. 그네의 페인트칠이 모두 벗겨져 갈색 녹으로 뒤덮여 있어 사실상 방치상태였다.

북구 평교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조합놀이대의 기둥이 부러져 '출입금지' 테이프를 감아 뒀으나,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동구 풍향동놀이터에서는 시소 의자가 모두 부서

져 있었고 아예 정기시설검사 합격증 게시대에 아무 것도 붙어 있지 않았다.

시민들은 깨지고 부서진 놀이 시설을 크게 우려했다.

임점례(여·70·서구치평동) 씨는 "비만 오면 어린이공원이 물에 잠기는데다 곳곳이 부서지고 깨지고 낙서 투성이라 관리가 안 되는 것이 뻔히 보인다"며 "명색이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를 위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놀이기구 투성이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걸 보면 괜히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고 밝혔다.

자치구 관계자들은 "예산 부족으로 보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구청 담당자는 "놀이시설 하나를 통째로 교체·보수하려면 3000~4000만원의 비용이 들고, 바닥재까지 교체하면 한 공원 당 1억원 가량 비용이 든다"며 "올해 어린이공원 시설 보수 예산은 5000여만원인데,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어린이 야외활동이 늘어 상반기에만 70여건의 보수 요청 민원이 들어와 모두 소진한 상태"고 밝혔다.

또 "정기시설검사 업체 측에서 당장 위험요소 없고 경미한 보수 사항만 있다고 판단하면 일단 합



2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장수어린이공원의 조합놀이대에서 흔들다리의 연결부 브래킷이 떨어져나간 쇠줄로 묶어놓은 모습.



2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원마루공원의 조합놀이대의 나무 기둥이 썩어 부러져 있다.

격시키고, 추후 보수하는 방식을 자주 이용한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놀이시설이 크게 파손됐는데도 '시설검사 합격'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시설검사 합격증이 1년 넘게 갱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최신화하겠다"는 답변 내놨다.

한편 광주시에는 올해 8월 기준 동구 9곳, 서구 55곳, 남구 30곳, 북구 90곳, 광산구 88곳 등 총 272개 어린이공원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건 브로커' 연루 광주·전남 경찰 7명 직위해제

'승진 뇌물' 등 혐의...경찰직장협 "철저한 감찰·승진 제도 개혁" 촉구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는 광주·전남 경찰들이 무더기 직위해제 되고 있다.

경찰들이 뇌물을 주고 승진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자 경찰직장협의회는 "'사건 브로커 의혹'을 감찰하고 승진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광주지검이 수사개시 통보를 한 광주·전남 경찰 7명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은 사건 브로커 A(62)씨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수수하고 사건무마를 해주거나 A씨에게 금품을 주고 인사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 청탁을 대가로 다른 공범과 함께 가상자산 사기 사건 용의자로부터 고가 외제차

등 18억54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상태다.

광주에서는 광주북부경찰 B경장과 광주경찰청 소속 C경감 등 2명이 직위해제됐다. B경장은 지난 2020년 광주광산경찰서 재직 당시 A씨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C경감은 A씨에게 금품을 주고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수사망에 포착됐다.

전남에서 직위 해제된 5명의 현직 경찰은 해남·목포경찰서 소속 경정 2명과 진도·목포 경찰서와 전남경찰청 소속 경감 3명 등으로 이들 모두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경감 또는 경정 심사 승진에서 2000~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하고 승진을 했다는 것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24일 서울 경

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브로커'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의 감찰과 승진 제도 개혁 등을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조직을 이끄는 고위직들이 인사 청탁으로 조직 전체의 공정·신뢰를 잃게 만들고 위상을 실추시켰다"면서 "경찰청은 경찰 승진 인사를 바리케이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조직 내부에 잔존하는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부정부패 적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진 인사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평가 과정과 결정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근무평정제도를 전면 개선하라는 것이다.

이어 경찰직협은 "부정한 인사청탁과 인사개입을 시도한 자들에 대해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경찰청에서 감찰해 징계하라"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다리 만져줘" 택시기사 성추행한 여자 승객 기소

60대 택시기사에게 '다리를 만져달라'며 강제추행을 한 20대 여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검 순정지정은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여수시 학동에서 탑승한

택시에서 60대 기사 B씨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택시에 탑승해 "블랙박스 전원을 끄고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면서 B씨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에 손을 닿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특정해 불잡아 조사해 지난 8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밥값 계산 잘못해서...황당한 재판 연기

검찰, 재판부 질문에 답 못해 69명에게 식사 제공한 혐의 곡성군수 항소심 한달 미뤄져

"검사님 금액이 맞지 않는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지난 23일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 심리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기부행위 가액 산정에 대해 재판장이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항소심 법정에서 선 이상철 곡성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곡성군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관계자 등 21명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지난달 19일 항소심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재판부가 "식사제공된 기부행위 가액을 전체 금액이 아니라 1인당 금액으로 산정해 공소장을 변경달라"고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 현재 재판 연기돼 23일 재판이 다시 열린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측에 기부행위 가액에 대한 설명을 재차 요구했다. 재판부는 "전체 영수증 금액에서 식사금액을 제공한 인원을 빼고 식사를 제공받은 인원만으로 나눠봐도 금액이 맞지 않다"고 설명을 구했다.

검사측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재판장은 "혹시 변호사님께서 알고 계십니까"라고 묻기까지 했다. 변호인 측은 '일부 인원을 빼고 나눈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지만 재판부는 "저희도 그런 추측을 하고 계산을 해봤지만 어떻게 계산해도 원단위까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측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까"고 요청해 다음달 21일 재판이 한번 더 연기됐다.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장을 변경한 수사검사 조차 변경된 공소사실을 설명하지 못해 재판이 한 달 가량 미뤄졌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한 공소사실을 재판부가 아니라고 해 맞춰가는 절차다"면서 "재판에 출석한 검사는 처음부터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아니고 후일 수사검사였고, 한 기일 연장되면 입장이 정리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